

# 미쓰비시 돌연 자산매각 보류 요청...대법 판단 주목

### 외교적 노력·한일 관계 악영향 언급하며 “최종 선고 늦춰달라” 한국 외교부 이어 일본 전범기업도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압박’ 강제동원 피해자·지원단체 탈퇴 선언, 민관협의회 사실상 좌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미루다 상표권 등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당할 처지에 놓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한일 관계 악영향을 언급하며 대법원에 최종 선고를 늦춰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에 이어 위자료 지급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피고 자격으로 상표권·특허권 특별 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치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선고 시점에 이목이 쏠린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 노역 피해자 양금덕(94)·김성주(93) 할머니와 관련한 대지전범의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20일과 29일 대법원에 상고·재항고 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각각 나주와 순천 출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10대 시절 일제 교장 등의 괴임에 속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 노역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두 할머니에게 위자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 관련 배상명령 이행을 미루다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명령을 확정짓는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재판부에 손해 책임을 확정짓는 대법원 판결과 자산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린 원심법원(대지전범) 판단의 부당성 등을 담은 서면 보충 자료를 최근 제출한 것이다.

미쓰비시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소됐고,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에서 논의해야지 한국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

해했다. 이에 더해 미쓰비시 측은 ‘피징용자에 대한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 사법부의 매각 명령 판단은 보류돼야 한다’ ‘한일 관계 전반에 비칠 악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보충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가 피해자 측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 가동하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미쓰비시중공업)가 재판부에 낸 재항고 이유보충서 등을 살펴봤다. 조만간 관련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역시 미쓰비시 측이 서면을 제출한 시점을 전후해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특별 현금화명령 사건 관련 민관협의회를 꾸려 일본과 교섭 노력을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28일 광주를 찾아 시민모임과 만난 자리에서는 “현금화라는 것은 일본 기업 자산이 실제로 넘어가는(강제 매각되는) 상

황을 의미하는 거다. 넘어가게 되면 일본이 거기에(대응해) 보복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일본의 보복 우려가 의견서 제출의 한 이유로 작용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선고 전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가 떠난 민관협의회가 사실상 좌초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광주에 기반을 두고 두 할머니의 소송을 지원하는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애초부터 민관협의회 참여를 거부한 데다,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 행위를 ‘신뢰 관계 파탄’으로 규정한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마저 민관협의회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 참여 없는 민관협의회가 존속해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원고 할머니들과 시민모임 측은 대법원 선고 시점을 올 가을로 내다보면서 “원고들이 90대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늦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이정선 광주교육감 “만 5세 조기 취학 사회적 합의 도출 중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논의 과정서) 유치종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제외돼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황당할 따위 없지 않았다”며 “이런 발표가 전담팀에서 일정한 기간 숙고의 결과물도 아니라고 하니 더욱 당혹스러울 수밖에...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성장과 발육상태가 서로 다른 아이들을 현재처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몇 세에 입학시키느냐 보다도 입학 초기 성장발달의 개인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해답은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어떨까 한다”며 “장기적으론 쉽지 않겠지만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 유초 연계교육, 영유아 무상교육을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부 교육단체 등은 세금 낭비 등을 거론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이 만 5세 조기 취학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강제동원시민모임 “목숨값이 931원? ...악의적인 우롱”

### 일본연금기금 99엔 송금에 분통

일본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한 것과 관련,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가 “악의적인 우롱”이라고 반발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일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일본연금기금이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정신영(92·나주) 할머니에게 931원을 지난달 6일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후생연금 탈퇴 수당은 77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으로 귀환할 때 지급됐어야 하는 수당으로, 931원은 77년 전 수당 액면가인 99엔을 한화로 환산한 값으로 추정된다.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화폐 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77년 전 액면가 그대로 99엔을 지급했다”며 “같은 통 값도 안되는 한화 931원을 지급한 건 악의적인 우롱”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후생연금 탈퇴 수당 명목으로 양금덕 할머니에게 99엔을 지급했으며, 2014년 강제징용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에게는 199엔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일본이 피해자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데에는 우리 정부의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는 주장도 폄파.

시민모임은 지난달 박진 외교부장관이 일본을 찾아가 해결책 마련을 공언하거나,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모습에 “한국 정부가 일본 앞에서 전전공공하



정신영 할머니의 통장에 7월 6일자로 일본 정부가 931원을 송금한 기록이 찍혀 있다.

면서 강제징용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는 99엔 지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지불 임금과 연금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고 제대로 지급하라”며 “한국 외교부 또한 굴욕적인 외교를 중단하고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금액 여부를 떠나 정 할머니가 받은 '931원'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기록이라고



4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가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한 일본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설명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전범 기업들은 피해 보상 등 소송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한일 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일본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는 평가다.

시민모임은 “피해 할머니들이 정당한 권리를 청구해서 미지불 임금 등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제2 순환도로서 차량 추돌

###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검거

자동차 전용도로인 광주 제2 순환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장은 4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A(28)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10분께 산월IC에서 유덕IC 방향 광주 제2 순환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B(46)씨의 경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후 귀가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 광주일보 70년

# 호남 최대 부수

## 열독률 호남 1위

매각 물건					매각 물건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b>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b> <경매 10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b>[아파트]</b>											
2022타경 2078	1	광산구 월계동 765-2 청담기리인아파트 101동 1층 104호 59.99㎡	아파트	334,000,000 334,000,000		2022타경 3149	1	북구 초당로7번길19, 103동 14층 1403호 64.8488㎡	아파트	340,000,000 340,000,000	
<b>[단독주택, 다가구주택]</b>											
2022타경 2276	1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384 605㎡ 대	단독주택	208,261,360 208,261,360	일괄매각, 제외의 담양군 대덕면 우월길 25-15 단층97.38㎡ 부속건물 단층창고21㎡ 제외의 창고 등 16.7㎡ [공부상참고:현황참고및화장실]	2022타경 1365	1	장성군 삼서면 상계리 253-1 707㎡ 전	전	91,916,000 91,916,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2타경 3330	1	남구 주월동 산228-6 473㎡ [공유자이흥하 1117/1419지분전부, 남서측부부는인접필지 건물외다소점유하고있으니정확한취득및경계확인을위한지적측량요]	임야	826,506,000 826,506,00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현황대지및 도로	2022타경 65130	1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477-8 2347㎡ [채무자오회규2/19지분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47,680,650 47,680,65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b>[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b>											
2022타경 2849	1	나주시 문화로226, 3층 301호 [빛가람동, 키움에피라소2차] 112.12㎡	근린시설	230,000,000 230,000,000		2022타경 64885	1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81-10, 4층 405호 25.9㎡	오피스텔	40,000,000 40,000,000	
2022타경 64885	2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81-10, 8층 803호 25.9㎡	오피스텔	41,000,000 41,000,000		2022타경 64885	3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81-10, 6층 602호 25.9㎡	오피스텔	40,000,000 40,000,000	